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HRI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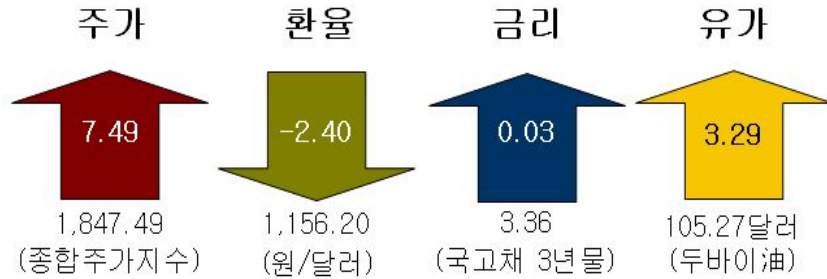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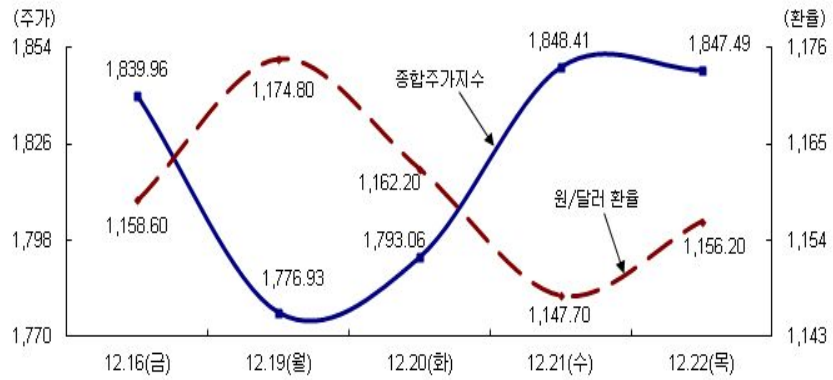


2012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와 뉴거버넌스의 태동
2. 유니폴라 시대의 종말
3. 유로제국의 환상
4. 팍스차이나, 1막 1장
5. 호루므즈 해협의 핵위기
6. 클라크 법칙의 역전
7. 그린과 그레이 전쟁의 격화
8.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9. 컬처믹스의 확대
10. 호모 헌드레드의 패러독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6~12.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임 희 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2 글로벌 10대 트렌드

■ 올해에 세계적으로 세계경제, 지역경제, 자원환경, 사회문화 분야에서 10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

①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태동.** 2012년 주요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선거라는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및 기업 위주였던 기존의 거버넌스는 소셜네트워크(SNS) 발달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신세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다. 버텀업(Bottom-up) 방식의 뉴거버넌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전의 탑다운(Top-down)방식과는 판이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거나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유니폴라(Uni-polar) 시대의 종말.**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으로서 미국은 세계 중심적 역할과 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달러화의 약세 기조 지속, 소버린 리스크의 재부각 가능성 및 중국의 G20의 부상 등으로 유니폴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국제통화체제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글로벌·지역 금융안정망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 한-중 FTA 조기 타결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③ **유로제국의 환상.** 유럽연합은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을 맺었으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재정 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고 경기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리더십 부재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향후 유로존은 은행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 재정규율 강화로 위기 확산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재원조달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 지역경제

④ **팍스차이나(Pax China), 1막 1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중국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 군사력 증강에 치중한 하드파워를 넘어 소프트 파워로 발전하기 위해 IT기술과 문화, 예술 분야를 육성하며 진정한 팍스차이나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경제 및 외교 면에서는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의 패권 강화를 기회로 이용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및 문화적 측면에서는 IT기술과 문화적 콘텐츠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⑤ **호루므즈 해협의 핵위기.**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주창하였다. 특히,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secure)'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안보 정

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란과 북한 등 핵 확산 위험국에 대한 통제 및 경계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 북측 책임자를 초청하여 북한이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 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자원환경

⑥ **클라크 법칙의 역전: 1차 산업의 부상.**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을 의미하는 '클라크 법칙'이 2000년대 들어 위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원 고갈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자원 개발 확대 때문으로 원자재 생산 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자원 보유국의 영향력 강화, 자원 전쟁의 격화 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노력 증대, 자원 외교의 강화, 대체 에너지의 발굴과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 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⑦ **그린(Green)과 그레이(Gray) 전쟁의 격화.** 환경보호(Green)와 경제발전(Gray)을 둘러싼 세계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교토의정서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 새 기후협약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격화되는 등 국가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체제 및 경제 성장 전략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 사회문화

⑧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상위 1%의 금융권의 실수에 있으나, 그 고통은 나머지 99% 국민들에게 돌아와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저소득층은 삶의 고통이 가중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불만 표출이 거세지고, 상위 1%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⑨ **컬처믹스(Culture Mix)의 확대.** 경제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제 인구 이동이 증대되고,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지리적, 시간적인 제약없이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이 용이해지면서 문화간 융합을 의미하는 컬처믹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예기되는 문화적 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장기대책 수립을, 기업은 문화 적응력을 의미하는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향상시켜 조직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감동을 유인해야 한다.

⑩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의 패러독스.** 호모헨드레드 시대가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킴으로써 인류의 삶 자체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빈곤층 바이오디바이드 심화 등 개인적 어려움과 생산성 하락, 사회복지 재정 등 국가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발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 10개 트렌드 선정

- 올해에 세계적으로 세계경제, 지역경제, 자원환경, 사회문화 분야에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세계경제 부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와 뉴거버넌스의 태동’, ‘유니폴라 시대의 종말’, ‘유로제국의 환상’ 등이 선정됨
 -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팍스차이나, 1막 1장’, ‘호르무즈 해협의 핵위기’의 2개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자원환경 부문에서는 ‘클라크 법칙의 역전’, ‘그린과 그레이 전쟁의 격화’의 2개 트렌드가 예상됨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컬처믹스의 확대’, ‘호모 헌드레드의 패러독스’의 3개 트렌드가 전망됨

< 2012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세계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와 뉴거버넌스의 태동 - 유니폴라 시대의 종말 - 유로제국의 환상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팍스차이나, 1막 1장 - 호르무즈 해협의 핵위기
자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크 법칙의 역전 - 그린과 그레이 전쟁의 격화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 컬처믹스의 확대 - 호모 헌드레드의 패러독스

II.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태동

○ (의미) 기존의 정부 및 기업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는 제도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매개로 시민사회와 신세대까지 포함한 새로운 성격의 거버넌스로 진화

- 경제난 속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확산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독재 체제에 대한 反정부 시위로 확대
- 선진국에서조차 탐욕스런 금융 권력을 비난하는 反월가 시위가 뉴욕에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反정부 폭동 사태 발생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

- 재스민 혁명과 反월가 시위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위가 조직화되고, 시민사회와 신세대의 결집이 이뤄졌음
- 시민사회와 신세대는 선거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기존의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참여를 확대하는 '재스민혁명 제 2라운드'를 형성

○ (내용) 주요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시민들과 신세대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투명성과 글로벌 상호의존이 강화되나 이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도 존재

- 주요국의 정권 교체와 뉴거버넌스의 확대

- 2012년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SNS를 통한 여론 형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성공한 권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물가 및 청년 실업문제 등이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 사회적 투명성과 글로벌 상호의존성 증대

- SNS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디지털 정보의 증가로 정부 및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사회적 투명성이 증대
- 유럽 재정 위기에서 보여지듯이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커지고, 경

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도 증대

- **세계적 불확실성의 증대**

- 중동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시아파의 부상과 이슬람주의의 확산, 서방과의 갈등 초래 등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 높음
-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긴축재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고조될 경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음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되면서 기존의 독재 권력 또는 계급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 가능성도 존재

○ (시사점) 기존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거버넌스는 쇠퇴하고 버텀업(Bottom-up)방식의 뉴거버넌스의 부상으로 이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세대간의 갈등과 기존 제도권 vs 비제도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 기존 제도권의 권력과 새로운 비제도권 사이의 갈등이 아닌 조화, 타협, 관용 등으로 거버넌스의 선순환적 변화를 추구해야 함

<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 >

< 2012 각국 대선 일정과 임기 >

구분		2011	2012	시기	국가	임기
선진국	미국	1.5(9.1)	1.8(9.0)	1월	대만	4년 중임제
	영국	1.1(7.8)	1.6(7.8)	3월	러시아	4년 중임제
	독일	2.7(6.0)	1.3(6.2)	4월	스페인	4년
	프랑스	1.7(9.5)	1.4(9.2)		프랑스	5년 중임제
	일본	-0.5(4.9)	2.3(4.8)	5월	아일랜드	5년
신흥국	중국	9.5(4.0)	9.0(4.0)	7월	인도	5년
	브라질	3.8(6.7)	3.6(7.5)		멕시코	6년 단임제
	인도	7.8(4.4)	7.5(4.4)	10월	중국	5년 중임제
	러시아	4.3(7.3)	4.1(7.1)	11월	미국	4년 중임제
				12월	한국	5년 단임제

자료 : IMF, WB.

주 : 1) ()은 실업률
2) 인도 실업률은 2005년 기준임.

자료 : 내외신 종합.

경제연구본부 최성근(02-2072-6223) · 임희정(02-2072-6218)

2. 유니폴라(Uni-polar) 시대의 종말

○ (의미) 글로벌 기축통화의 발행국으로서 미국이 누렸던 중심적 역할과 특권의 유니폴라 시대가 미 경제 회복 지연, 달러화 위상 하락 및 중국의 부상 등으로 끝나고 국제통화체제가 다변화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내용) 미국 경제 비중 하락, 달러의 추세적 약세 지속, 소버린 리스크의 재부각 및 중국 등 대안세력의 등장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의 개편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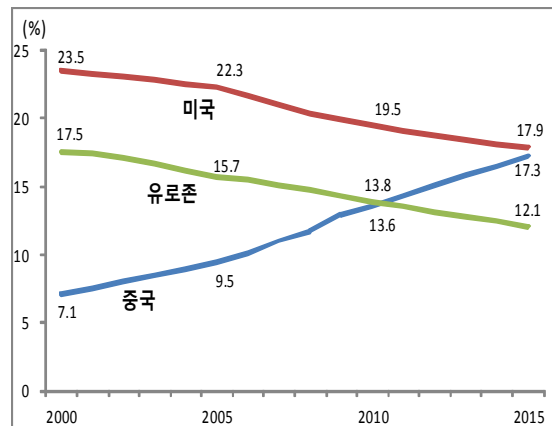
- 냉전시대 이후 미국 중심의 유니폴라(Uni-polar) 시대가 이어져 왔음
 -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으로서 경제적 권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확보한 유니폴라(일극) 시대를 누려왔음
 -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거래비중은 2010년 4월 중 일평균 기준 84.9%(합계 200%)로 2001년 89.9%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음
-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쌍둥이 적자 지속으로 달러의 추세적 약세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
 - 미국 경제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000년 23.5%(PPP 기준)에서 2010년 19.5%, 2015년까지 17.9%로 하락할 전망이다
 - 달러 유동성 급증과 글로벌 불균형으로 달러 약세 지속 : 미국 금융위기 이후 1,2차 양적완화로 각각 1조 7500억 달러, 6,000억 달러가 시장에 공급됐고 경상수지 적자도 2010년 4,709억 달러에 이어 2011년에도 4,676억 달러에 달할 전망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추이>

시 기	주요 협의	내 용
1944	브레튼우즈 체제	금-달러 본위제
1976	킹스턴 협정	변동환율제
1985	플라자 합의	달러-엔 간 환율 공조
1999	유로존 체제	유로화 도입
2008~ 현재	글로벌금융위기	SDR 역할 확대 및 기축통화 다변화 논의

자료: 저자 정리.

<주요국의 경제 비중 추이(PPP기준)>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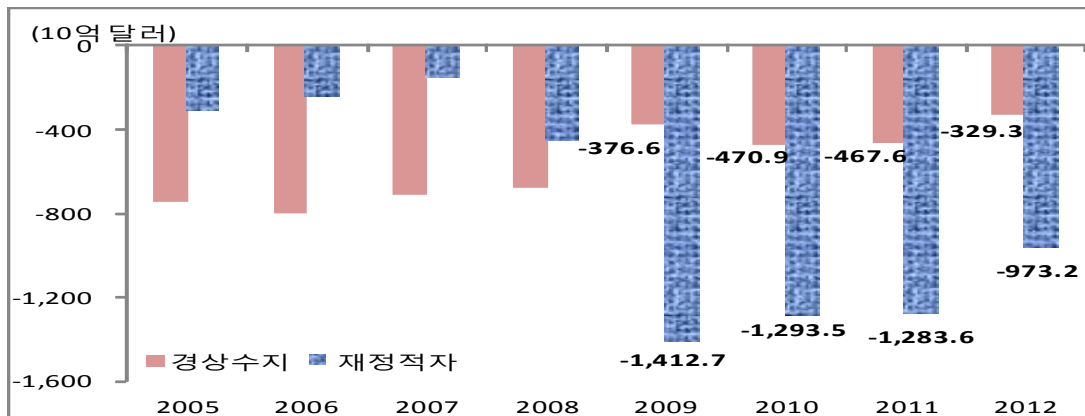
주 : 유로존은 1999년 유로화 도입 당시의 11개 회원국 기준임.

- 미 재정적자 감축 실패에 따른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의 재부상과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정치적 권력도 약화
 - **미온적인 재정적자 축소** :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9년 10.1%에서 2011년 8.7%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정치적 리더십도 부재**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내에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리더십도 문제
 - **최고 등급의 국가신용도도 하향** :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2011년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인 AAA1)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 바꿨고 Fitch사도 11월 28일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중국이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도 변화되고 있음
 - **중국, G2로 부상** :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G2로 등장했고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의 위상도 커지고 있음
 - **글로벌 거버넌스 G20 체제로 변화** : 위기 이전 세계 최고 협의체로 작동했던 G7이 G20,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신 G7 체제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고 있음

○ (시사점)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글로벌·지역 금융안정망 강화에 적극 참여,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 한-중 FTA 조기 타결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함

〈미국의 쌍둥이 적자 추이〉



자료 : IMF, CBO(미 의회예산국)
 주 : 2011년부터는 각 기관의 추정치임.

경제연구본부 조호정(02-2072-6217)

1) 최고 신용등급이 AAA(S&P 기준)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 15개국임.

3. 유로제국의 환상

○ (의미) 유럽연합은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을 맺었으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이 생사의 기로에 놓임

- 1998년 유로존과 유럽중앙은행이 출범하면서, 통화정책과 금리정책 권한이 개별국가에서 유럽중앙은행으로 이양됨
 - 하지만 엄격한 재정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채 재정정책 권한은 여전히 개별 국가에 속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잉태
-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로존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붕괴될지, 아니면 통화동맹을 넘어 재정통합으로 진화할지 기로에 놓임
 - 유럽 재정위기 극복 여부는 2012년 이후 세계 경기전망의 핵심 요소
 - 유로존과 국제사회가 단기적으로 위기 확산 차단에 성공할 경우 2012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다, 위기가 확산되어 장기침체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내용) 재정-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고 경기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리더십 부재로 유로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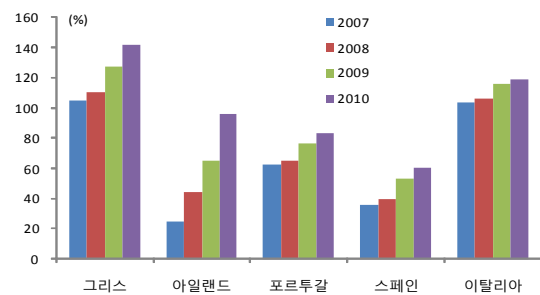
- 재정-금융 복합위기 직면 : 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거쳐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프랑스 은행들은 과도한 그리스 국채 보유와 對그리스 익스포저로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강등됨
 - 프랑스 은행들의 對이탈리아 익스포저 및 국채보유량은 對그리스의 5배에 달하므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프랑스發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로존 은행에 충분한 자본을 공급해야 하지만, 유로존은 현재 자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재정위기-경기둔화 악순환 :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부채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7년 54.8%에서 2011년 74.5%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7년 -0.1%에서 2011년 -4.4%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
 - 유로존 국가의 평균 실업률도 2007년 6.5%에서 2011년 9.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2년에도 9.7%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전망

<프랑스 4개은행의 신용위험노출 현황>

상대국가		익스포저	타국 국채 보유액
對內		20,453	1,183
對外	對그리스	439	101
	對이탈리아	2,607	530
	기타	17,557	2,800
	총계	41,055	5,043

자료 : 유럽중앙은행 감독청(EBA)
단위 : 억 유로

<재정위기국의 국가부채 추이>



자료 : IMF
주 :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 **리더십 부재** : 유로존의 리더십 부재로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위기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시장 불신을 야기
 - 재정위기국과 재정건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법 마련과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또한 유로존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반대로, 유럽중앙은행의 재정 위기국 채권 추가매입도 차질을 빚고 있음

-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동반하락 우려** : 유로존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S&P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16개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프랑스에 이어 유럽 최대 자본국인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

○ (전망) 유로존은 단기적으로 재정-금융위기 확산을 막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전망이나, 난제가 산적해 있음

- **단기 전망**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 은행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금융위기 차단에 나설 전망
 -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권 매입에 나섬으로써, 재정 위기국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
 - 하지만 1~2조 유로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재정 위기국과 유로존 은행들의 자구책이 미진할 우려도 큼
- **장기 전망**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유로본드 발행 등 재정통합 강도(強度)도 서서히 높일 전망
 - 12월 9일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연합 성장과 안정협약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딤
 - 하지만 독일이 유로본드 발행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재정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경제연구본부 이준협(02-2072-6219)

4. 팩스차이나(Pax China), 1막 1장

○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가 중국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

- 구소련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위상이 크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파워가 중국으로 급속히 시프트 중
 -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적 세력으로 재부상하며, 이른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재림이 시작
 - 하지만, 그 이후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연이은 정치 및 경제적 타격으로 위상이 크게 흔들림
- 아시아 부흥을 이끌며 급부상한 중국은 막강한 경제 및 군사력과 기술을 함양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²⁾를 향해 세계의 주도 세력으로 이동이 본격화됨
 - 경제력은 GDP 세계 2위, 수출 규모 세계1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등 경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했고, 이에 따라 위안화 파워도 동반 상승. 하지만 문화적 역량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
 - 군사비 지출에서도 2006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군비 지출 국가로 올라섰으며, 우주정거장(텐궁 1호) 건설 등 과학 기술의 도약 단계로 진입

<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 GDP 세계 3위 달성(2009년 이전까지) - 2004년 수출 세계 3위 진입 - 외환보유액은 2006년 세계 1위 진입 (1조 달러 미만 수준)	- 2010년 GDP 세계 1위 도약 - 2009년 수출 세계 1위 진입 - 외환보유액 2009년 2조 달러, 2011년 3조 달러 돌파
군사	- 2007년부터 미국과의 군사비 지출 규모 격차는 2001년 약 10배에서 6배로 감소 - 군비 지출이 국방비 예산의 약 1.5배	- 첨단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개발
외교	- 200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창설 - 1991년 APEC, 2005년 EAS, 1999년 G20 가입 및 ASEAN+3 구도 형성 - 외교 테이블에서 미국과 위안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양상	- 미국과 함께 G20의 핵심 G2로 부상 - 2011년 미국의 EAS 가세로 미중 상호 견제 체제 구축 - 남중국해를 두고 아세안지역과 대립
문화	- 인터넷 통제로 문화적 소통 억제	- R&D 지출 : 2011-2015년 사이 GDP의 2.2% 달성 목표 - 2011년 10월, 문화강국 달성 언급

2) 경제력, 군사력 등의 물리적 힘으로 대변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과학 기술과 문화 및 예술 등을 행사하는 능력을 의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

○ (내용) 경제, 군사력 증강에 치중한 하드 파워를 넘어 IT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강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음

- **경제력** :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개혁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인을 통해 경제 규모는 지난 10년간 크게 격상
 - 세계 GDP 중 중국의 비중은 1995년 2.4%에 불과했으나 2010년 9.3%로 미국의 24.1% 다음으로 높게 성장
 -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2배 증가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추구로 양적인 외연적 성장의 성과가 컸음³⁾
 - 외환보유액은 2011년 이미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최대 외환보유를 유지하고 있으나, 달러자산 과잉으로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외환보유 다변화, 위안화 하드커런시,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신전략 모색
- **군사력** : 미국과 비교해 여전히 격차가 크나, 5년 내에 군사력 수준이 좁혀질 전망
 - 중국이 세계 군사비 중 지출 비중은 2001년 3.8%에서 2010년 7.3%로 10년간 2배 증가
 - 중국의 군비 지출 규모는 2001년 395억 달러로 미국의 1/10배에 불과했으나 2010년 약 1/6배로 격차를 줄이며 세계 2위의 군사력 보유 국가로 변모
 -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비교적 열세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수륙양용 상륙함 등 보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세계 GDP 대비 각국의 GDP 비중 >
(단위 :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1995	24.9	5.3	8.5	17.7	2.4
2000	30.9	4.1	5.9	14.5	3.7
2005	27.7	4.7	6.1	10.0	5.0
2006	27.1	4.6	5.9	8.8	5.5
2007	25.2	4.6	6.0	7.9	6.3
2008	23.4	4.6	5.9	8.0	7.4
2009	24.1	4.6	5.7	8.7	8.6
2010	23.1	4.1	5.2	8.7	9.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 세계 군사비 지출 비중 추이 >
(단위 : %)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2001	36.3	3.8	4.5	5.7	2.8
2002	38.4	4.1	4.5	5.5	2.9
2003	41.1	4.2	4.5	5.3	2.9
2004	42.5	4.4	4.2	5.2	2.9
2005	42.7	4.8	4.1	4.8	3.0
2006	42.1	5.5	3.9	4.7	3.2
2007	41.7	6.1	3.8	4.6	3.3
2008	42.5	6.4	3.8	4.3	3.4
2009	43.2	7.1	3.7	4.3	3.4
2010	42.8	7.3	3.7	4.3	3.6

자료 : SIPRI,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1.

주 : 2001-2009년 환율은 2009년 기준.

3) 중국은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내수위주의 성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 **IT 기술과 문화** : 소프트 파워 구현을 위해 정보 기술과 예술, 교육 등 문화적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임
 - 중국의 전체 재정 지출 가운데 교육과 과학 기술 항목 지출은 각각 약 14.0%, 3.4%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신 성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을 1.8%에서 2.2%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미국과의 과학 기술 격차가 약 8년이지만 한국이나 일본과는 기술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음. 특히 우주, 항공, 해양 분야는 이미 2010년부터 한국 추월

< 중국의 재정지출 항목 추이 >

(단위 : 억 위안)

	교육	과학기술	총지출
2007	7,122 (14.3)	1,783 (3.6)	49,781 (100)
2008	9,010 (14.4)	2,129 (3.4)	62,593 (100)
2009	10,438 (13.7)	2,578 (3.4)	76,300 (100)
2010	12,550 (14.0)	3,052 (3.4)	89,874 (100)
2011.10	10,668 (13.8)	2,555 (3.3)	77,560 (100)

< 2010년 국가별 기술격차 동향 >

(단위 : %)

	기술수준(%)		미국과의 격차(년)	
	2008	2010	2010	'08-'10
미국	76.6	78.7	-	-
EU	72.9	75.0	0.9	0.2 ↓
일본	70.4	73.0	1.6	0.1 ↓
한국	56.4	60.2	5.4	1.2 ↓
중국	46.9	51.7	7.9	1.4 ↓

자료 : CEIC.
 주 : 1. ()안은 전체 총지출 중 비중.
 2. 2011년은 1~10월 누계.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시사점과 과제) 중국의 팍스차이나 부상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면에서 중국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경제공동체적 관계 활용이 필요함

- **경제 및 외교** :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패권이 아시아 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해외 투자가 아시아 지역 가운데 한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점차 위안화 역외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
 - 남중국해를 포함한 범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외교적 대립이 예상되므로 한중FTA를 이용해 동북아 경제의 균형자 구축 필요
- **과학 기술 및 문화** : 중국이 소프트 파워로 노선을 전환하고 있어 IT 부문의 경쟁이 예상되지만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우리의 문화적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한재진(02-2072-6225)

5. 호르무즈 해협의 핵위기

○ (의미)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핵안보 강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란 핵 위기 : 지난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이란 핵 보고 서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화
 -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으로 두는 사하브3 미사일을 위한 신형 핵탄두, 핵물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 2008년과 2009년 핵개발 관련 컴퓨터 모델링 연구 실시, 핵폭탄 중성자 발생장치 관련 실험 및 연구 진행 등 군사적 목적을 갖는 핵 개발 추진
- 핵 안보 강조 :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주창하면서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 등 3개 핵심 조치 제시
 - 특히, 그는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 (secure)’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

○ (내용)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란과 북한이 핵 확산 위험국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핵 확산 현황 : 세계적으로 핵물질 재고량은 고농축 우라늄 1,600톤, 분리 플루토늄 500톤으로 추정되며, 전체 분리 플루토늄 가운데 절반인 민수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호 상태에 있어 탈취·테러 등 불법 접근의 우려가 있음
 - 미·러는 2010년 4월 양국의 핵탄두를 감축하는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서명하는 등 핵무기 긴축 노력 지속

< 세계 핵분열성 물질 재고량 추정치 >

	고농축 우라늄(톤)	분리 플루토늄 (톤)
군사용	1,600	250
민수용	10	250
총량	1,600±300	500±25
핵무기 생산 가능 수	약 60,000기	약 60,000기

자료 :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0'.

< 핵무기 보유 현황 >

핵 보유국	최초 보유	보유량	사실상 핵 보유국	최초 보유	보유량
미국	1945	5,000	이스 라엘	1967	80
러시아	1949	8,000	남아공	1982	0
영국	1952	65	인도	1988	80~100
프랑스	1960	290	파키 스탄	1990	90~110
중국	1964	180	북한	2006	10기 이하

자료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2011.

- **이란 핵 문제** : 미국에게 있어서 이란 핵은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세계 전략 수행과 미국의 핵 확산 억제에의 성과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
 - 미국은 국제연합(UN) 안보리에서 ‘대 이란 제재결의안 1929호(2010. 6)’ 및 ‘포괄적 이란 제재법(2010. 7)’을 발효
 -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비군사적 제재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핵 문제** : 이란의 핵 개발이 패권과 안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존속과 직결되어 진행됨
 - 오바마 행정부의 핵 외교 역량은 상대적으로 이란 핵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중동 문제 해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도발이 반복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보복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
- **원자력 안전 문제**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초대형 원자력 안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대 핵 현안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가 대두
 - 2010년 말 현재 29개국에서 원전 433기가 가동 중이며, 64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고, 2020년까지 약 290기의 원전이 신규 도입될 전망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 원전의 안전 기준 대폭 강화가 필요
- **(시사점) 이란과 북한 등 핵 확산 위험국에 대한 경계와 함께 원자력의 신뢰 회복을 통한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보장하는 이중적 전략 필요**
 - **핵 확산 위험국에 대한 경계 지속** : 이란과 북한 등 핵 확산 위험국에 대한 통제 및 경계를 지속해야 함
 -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동 걸프에서 또 다른 중동 분쟁이 폭발해 원유 등 원자재가 상승 우려가 존재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측 책임자를 초청하고, 북한이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 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
 - **원자력의 신뢰 회복**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락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원전 위축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국제 에너지 안보를 완화시키고,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함
 - 극단적 기상 이변과 대형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초과 설계 기준 사고(Beyond Design Basis Accident)’를 안전 기준으로 채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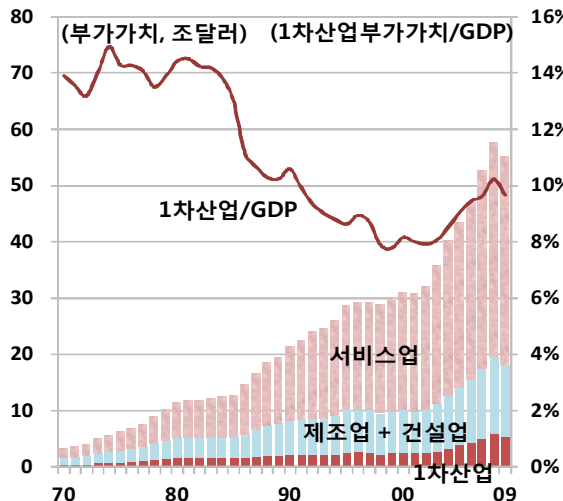
경제연구본부 이해정(02-2072-6222)

6. 클라크 법칙의 역전: 1차 산업의 부상

○ (의미) 경제 발전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클라크의 법칙’에 대하여, 최근 원자재가 상승, 자원개발 확대 등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법칙의 붕괴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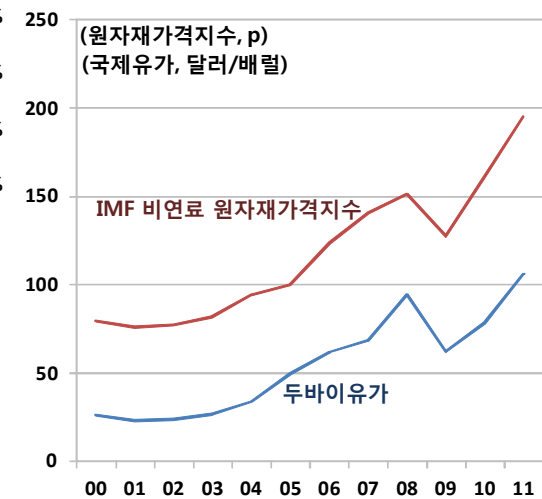
- 클라크 법칙이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순으로 이동한다는 이론임⁴⁾
 - 1차 산업은 농림수산업, 축산업, 광업 등이며, 2차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가스 등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의미함⁵⁾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원자재를 생산하는 1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세계 전체의 1차 산업/GDP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9.7%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세계 1, 2, 3차 산업 규모 추이 >



자료: UN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명목 부가가치 기준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지수 추이 >



자료: IMF, 한국석유공사.
주: 원자재가격지수는 2005=100.

4) Clark, C.(1957),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5) 광업은 1차 또는 2차 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광업의 산출물인 광산물을 성격상 원자재로 고려하여 광업을 1차 산업으로 분류함.

○ (내용) 이는 자원 고갈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자원 개발 확대 때문이며, 향후 자원 보유국의 영향력 강화, 자원 전쟁의 격화 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1차 산업 비중 상승의 원인 : 1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자원 고갈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원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임

- 자원 가격 상승 :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0년 전에 비해 약 4배 상승하였으며, 원자재가(비연료 원자재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2.5배가 높아짐
- 자원 개발 확대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차 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자원 개발 붐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농림수산물도 산업내 에너지 투입 중간재 가격 급등, 산업바이오 기술의 발전,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

- 자원 보유국의 영향력 강화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자원 보유국의 세계 경제 및 국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계 경제 협의체인 G20중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원 부국에 해당됨

- 자원 전쟁의 격화 예상 : 미래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원자재 확보를 위한 국가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이라크 전으로 대변되는 중동 지역에서 발발되는 전쟁들을 자원 전쟁의 예로 들 수 있으며,
- 또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도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미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노력 증대, 자원 외교의 강화, 대체 에너지의 발굴과 산업화 추진 등의 노력이 요구됨

산업연구본부 주 원(02-2072-6235)

7. 그린(Green)과 그레이(Gray) 전쟁의 격화

○ (의미) '그린'으로 상징되는 환경보호와 '그레이'로 상징되는 경제발전
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세계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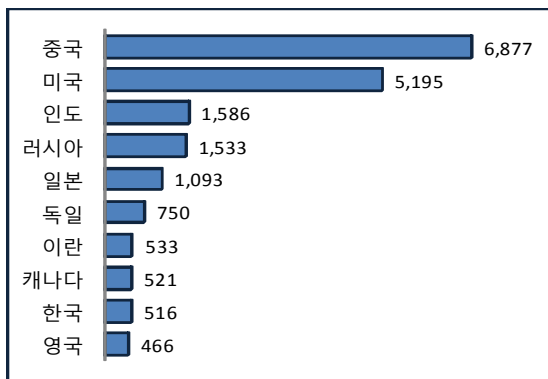
- **Green** : 지구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임
- **Gray** : 세계 각국은 생존 경쟁의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내용) 교토의정서 시효 만료 이후 법적 강제성을 갖는 새 기후협약 논의가 201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가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선진국**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녹색 성장'을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것임
 - 유럽은 앞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강화할 것임
 - 미국은 교토의정서 거부로 인한 반(反)환경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법적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임

< 연간 CO₂ 배출량(2009년) >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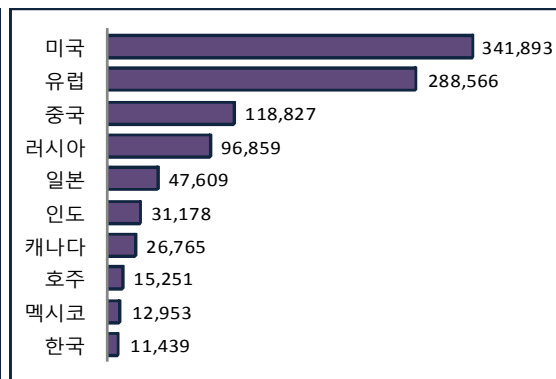


자료: IEA (2011)

주: 10개국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65.8%

< 누적 CO₂ 배출량(1900~2009년) >

(단위: 백만톤)



자료: UNDP (2009)

6) 교토의정서(1997년 12월 채택, 2005년 2월 발효)는 지구온난화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주요국은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최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12년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2020년에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함.

- **개발도상국** : 먼저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견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⁷⁾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놓고 이와 같은 기술이 없는 개도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요하려 할 것임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의 동참을 압박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인도를 비롯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녹색 보호주의’에 맞서 세계적 합의 도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 **환경오염 책임공방** : ‘지속가능한 발전’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환경오염 행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
 - 세계적 사회단체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보다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요구할 것임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압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시간 끌기, 책임 전가 등 이기적 태도를 유지할 것임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염자 총회(Conference of Polluters)’라는 비난에 직면함

○ (시사점) **회색성장에서 녹색성장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에너지 체제 및 경제성장 전략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함**

-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말뿐인 녹색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건설·토목·원자력 뿐만 아니라 녹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요구됨

산업연구본부 백홍기(02-2072-6228)

7)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는 장하준이 2003년 발표한 책으로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

8)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1987년에 발표한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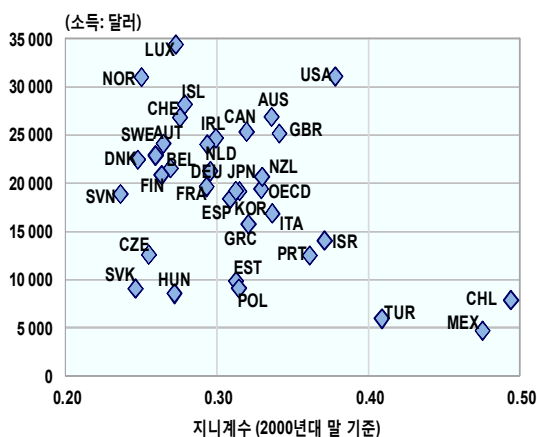
8.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 (의미)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월가 시위 등 상위 1%에 대한 불만 표출이 전이되고, 2012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치루는 대선의 영향으로 상위 1% 계층과의 갈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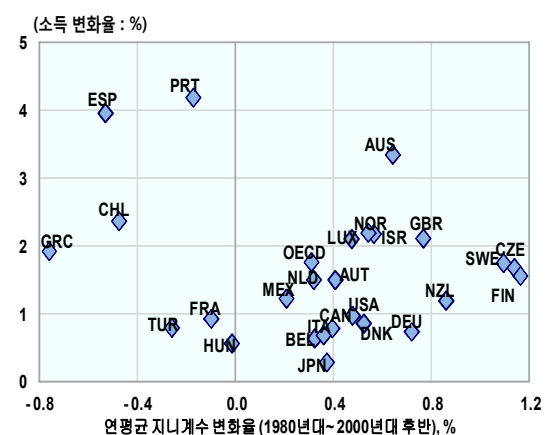
○ (내용)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월가 시위'로 증폭되는 상위 1%에 대한 불만이 세계로 전이되어 특권층의 책임 및 사회적 변혁이 요구

- (소득 양극화)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말까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지니계수⁹⁾도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불평등 문제가 악화되었음
 - OECD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도 증가하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어려워져 상위 1%와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자들이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을 의미하는 '쥐어 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
 - 중산층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저소득층으로 몰락하여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면서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국가별 소득 대비 지니계수>



<소득 변화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



자료: OECD Statistics.

9)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고 지수가 높아질수록 불균형분배 상태를 나타내고 지니계수 1은 완전 불균형 상태를 나타냄.

- (도전받는 1%) 상위 1%에 대한 불만이 증폭, 불평등한 사회의 변화를 요구
 - 2008년 상위 1% 그룹인 대형금융회사가 붕괴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99%의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 상위 1%의 삶은 변함이 없고 나머지 99% 국민들은 직장과 집을 잃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만이 폭발함
 -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발생하여 세계로 전이됨¹⁰⁾
- 상위 1%에 속하는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탐욕에 대항하는 세력은 금융 중심의 불평등한 신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요구
 - 생산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에서 벗어나, 탐욕스러운 금융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투기적인 금융이 실물경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임
 -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는 상위 1%에게 자본소득을 집중시키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사회적 불만족이 분노로 확대됨
 - 금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보이며, 신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¹¹⁾

○ (시사점)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빈곤층의 경제적 고통이 개선되기 어렵고, 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

- 사회체제의 변화 없이 빈곤층 생활여건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¹²⁾
 -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 계층은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빈곤층의 생활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빈곤층의 고통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할 것
 - 소득 상위 계층은 자본소득 등 손쉬운 소득원을 확보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만 표출 등 소득 계층 간 갈등이 우려됨
 -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하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사회적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산업연구본부 이원형(02-2072-6233)

10) 2011년 10월 17일 국제행동의 날 시위에는 유럽 118,350명, 아시아 3,800명, 미주 21,100명이 참가하였음

11)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세 및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되는 등 금융중심의 신자본주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12) OECD, An Overview of Growing Income Inequalities in OECD Countries: Main Finding, 2011.

9. 컬처믹스(Culture Mix)의 확대

○ (의미) 경제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제 인구 이동이 증대되고,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지리적, 시간적인 제약없이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이 용이해지면서 문화 융합을 의미하는 컬처믹스가 가속화

- 인구 이동성 증대 : 국제 인구 이동의 증대로 기존 문화와 통합하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이 국가간에 현안으로 대두
 · OECD 국가들의 고용증가 중 39%가 국제이주에 따른 결과이며,
 · 그리고 2003~2007년 인구성장률의 59%를 국제이주인구가 기여하면서, 이들 이주 인구가 근로연령인구의 1/3 이상을 차지¹³⁾

- 디지털 상품의 보급 확대 :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확대는 기존의 주류문화를 빠르게 붕괴시키는 한편으로 소수 문화간에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 2011년 아랍 국가의 '재스민 혁명'이 발발된 주요 배경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으로 한 조직화임
 · 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韓流)가 유튜브, SNS 등으로 인해 아시아권을 넘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¹⁴⁾
 · 이와 같이 그동안 변방에 존재하였던 문화가 디지털 기술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화 수용 및 융합이 촉진

○ (내용) 문화 변동성이 증대되고, '가상 문화 제국'이 형성되며, 한편으로 문화 갈등이 심화

- 문화 변동성 증대 : 대중문화가 빠르게 형성, 전파되는 한편으로 퓨전,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소규모 문화가 빠르게 생성, 공존하는 문화 변동성이 증대
 · 이질적 문화가 급속하게 그리고 손쉽게 유입되면서 이전보다 생존력이 짧은

13) 최근 해에 많은 OECD 국에서 인구 성장의 대부분과 근로연령에 접어든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국제 이주에 의한 것이었는데, 남부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등 국가에서는 인구성장의 약 90%가 이주에 의함 (자료: OECD(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SOPEMI 2010.*)

14) 2010년 유튜브 K-Pop 동영상의 대륙별 조회수: 아시아 5.7억건, 북미 1.2억건, 유럽 5537만건, 남미 2,059만건, 중동 1,520만건, 호주 1,074만건, 아프리카 192만건 (자료: 중앙일보).

문화가 다수 만들어지고(fusion), 한편으로 경계를 쉽게 넘나들거나 허물어 지는(crossover) 등으로 인해 기존 문화의 진화가 빨라짐

- **‘가상문화제국’ 형성** :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기존의 문화 전파를 제약하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소비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상 문화 제국’이 형성
 -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존의 동질적인 생활방식을 가진 거대한 공동체보다는 비슷한 생활방식, 취향, 문화를 가진 무수히 많은 소규모 집단(micro-trend)이 형성
 -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연대감이 높은 소규모 집단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가상문화제국’으로 발전

- **문화 갈등 심화** : 이질적인 문화를 기존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행동이 있는 한편으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문화 갈등이 심화
 - 자국 문화를 고수하고, 외래 문화를 배척하거나 최소한도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문화간 갈등이 크게 심화됨
 - 반사 행동으로 외래인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하려는 행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조직화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임
 - 경제적 곤란으로 외국 이주민이 많았던 선진국의 경우, 경기 침체나 저성장이 길어질수록 문화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감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임

○ (시사점) 정부는 **컬처 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장기대책 수립을, 기업은 문화 적응력을 가리키는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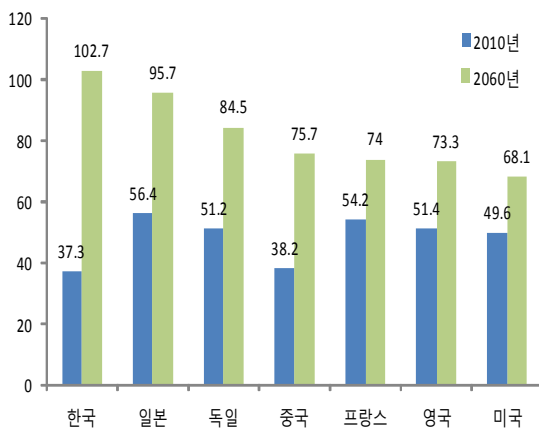
-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 또한 ‘한류’(韓流)의 지속과 글로벌적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개발이 요청
- 기업은 문화 지능을 향상시켜 조직 통합을 제고하고 고객 감동을 유인
 - 문화지능이란 ‘새로운 문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 문화지능이 높을수록 고객, 직원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열린 문화’를 조성

산업연구본부 이장균(02-2072-6231)

10.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의 패러독스

- (의미와 현황) ‘호모헨드레드 패러독스’란 의학의 발달로 수명연장이라는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자신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의미
 - 의학의 발달로 노화를 극복하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여 ‘호모 헨드레드’시대가 가능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 현상도 표출되고 있음
 - 바이오 기술의 혁신을 통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류의 가장 큰 욕망인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삶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인 인구를 증대시키고, 사회전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부정적 요인을 드러내고 있음
- (내용) 호모헨드레드 시대는 노년층 빈곤, 모바일디바이드 현상 심화 등 개인적 어려움과 생산성 하락,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국가적 부담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게 만들어 노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 전세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결국 노인 1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이는 노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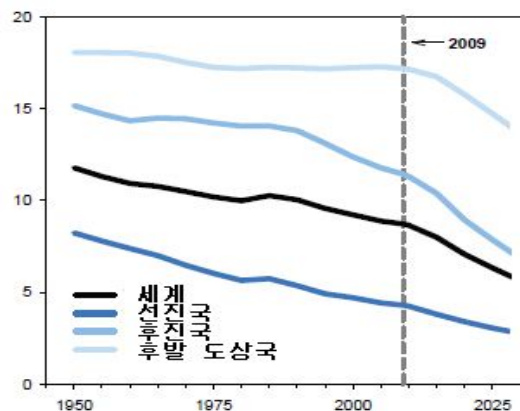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 2010-2060년>



자료: 통계청(2011)

주: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 비율(%)>



자료: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주: 65세이상 한명 당 15~64세 생산가능인구비율

- (노인 비중 급증으로 재정부담 증가) 전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부담 급증
 - 특히,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기준 2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 고령국가인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43.9%이던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2000년대에 들어 46.4%로 여전히 높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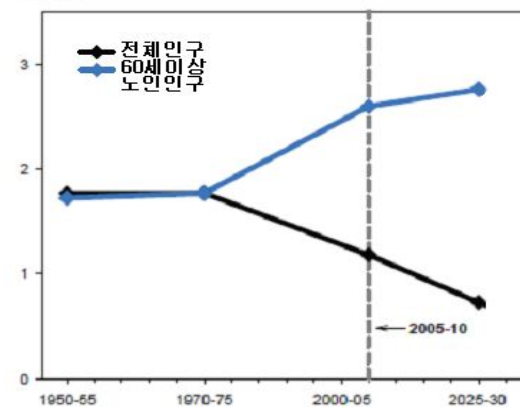
<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영국)>

(단위: 백만파운드%)

연도	노인	총사회보장비	비중
1994-1995	37,274	84,848	43.9
1997-1998	42,553	93,346	45.6
1999-2000	47,418	100,777	47.1
2000-2001	48,928	105,510	46.4

< 전체인구 및 노인인구 증가율 >

단위: %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10

- (모바일디바이드와 노년층 빈곤 현상의 심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 빈곤과 모바일디바이드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심화
 - 모바일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이 정보의 활용상 불이익을 당하는 모바일디바이드 현상이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다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됨
 -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노년층 빈곤현상이 심화되어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주변화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갈등과 문제를 초래

○ (시사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고령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등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
 - 안정적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고령친화산업 선진강국을 구축하고, 사회복지비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고령자를 활용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산업연구본부 장후석(02-2072-6234)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 16일	12월 2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1.86	1.95	0.09%p
	엔/달러	92.93	88.43	81.19	77.88	78.07	0.19¥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022	1.3044	0.002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866	12,170	304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402	8,395	-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33	3.36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58.6	1,156.2	-2.4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40.0	1,847.5	7.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 16일	12월 2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3.77	99.42	5.65\$
	Dubai	78.06	73.14	88.80	101.98	105.27	3.2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295.00	305.67	10.6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